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 개정이유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 등을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상정 또는 첨부하도록 하여 교육자치법규의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폐교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교육자치법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나.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법제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 상정 또는 첨부하도록 정함(안 제8조).
- 다. 대전광역시립학교를 폐교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함(안 제9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법예고)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주관과장은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을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가 변경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학부모가 동의하여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경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폐지되는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법예고)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u>1. 학사제도</u> <u>2. 시험</u> <u>3. 입학금 및 수업료</u> <u>4. 사용료 및 수수료</u> <u>5. 교육정보화관련 제도</u> <u>6.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주관과장은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u>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 ③ (생략)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대전광역시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생략)

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을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가 변경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학부모가 동의하여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생 략)

2. 경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폐지되는 경우

③ (중전 제2항과 같음)

## 관계법령

###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 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